

12세 아동 영구치 충치수 선진국 비해 여전히 높다 복지부 구강건강 실태조사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영구치 충치수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74세 노인의 영구치도 3년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구강보건연구소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9일 발표한 '2003년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영구치 충치수는 지난 95년 3.11개에서 2000년 3.37개, 2003년에는 3.25개로 정세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1.4개, 영국 1.1개, 캐나다 2.1개, 일본 2.65개 등으로 나타난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 12세 아동이 군지역 보다 충치수가 많았으며, 이는 당분 섭취량에 비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65~74세 노인의 영구치도 지난 2000년 16.26개에 비해 2003년 12.06개로 크게 악화됐으며, 의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는 노인의 경우도 2000년 40.2%에서 2003년 42.5%로 높아

지는 등 3년전에 비해 구강건강상태가 상당히 악화됐다.

반면, 우리나라 5세 아동 유치의 충치수는 지난 95년 5.74개에서 2000년 5.48개, 2003년에는 4.12개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 경제발전이 따라 당분 섭취가 증가하면서 충치수가 증가했다라도 이후 충치예방 프로그램 등 공중구강보건사업 확대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으로 국민구강건강상태가 개선된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함께 악화된 구강건강상태가 정세되고 있다"며 "향후 구강보건교육·홍보 및 공중구강보건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공중구강보건사업의 센터역할을 하는 보건소 및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실을 현재 274개소에서 매년 66개소씩 설치해 오는 2007년까지 52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발급기 설치 거부시 '세무조사'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 단계적 확대계획 발표

국세청이 지난 6월 16일 내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 단계적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사실상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설치거부자 명단을 수집,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또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2천4백만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도입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같은 실정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선 병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급에도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돼 실시간으로 현금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부동산투기지역 등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사회통념상 연간매출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 ▲지방정장이 '과표양성화 중점관리 업종'으로 지정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천4백만원 미만이라도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일정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 기간 중에는 지난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오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지난해 매출액이 2천4백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치과 의사, 의사 등 의료 전문직종 및 기관의 경우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전산입력이 완료된 후 행정지도 대상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 이후 신규 구입하는 신용카드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처음부터 내장된 형태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지도로 인해 올해 연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장이 약 60만개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발급기는 현재 신용카드단말기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형태이며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3대 위원장에 치협 정재규 협회장 재선

치협이 다시 한번 보건의약계의 화합을 이끌며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조율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됐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6월 22일 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회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3대 위원장으로 재선됐다.

이날 선거에서는 정 협회장과 김재정 의협 회장이 위원장으로 추천돼 보이지 않는 예민함과 긴장감이 감돈 가운데 협상 없이 바로 표결에 돌입했다.

선거결과 정 협회장과 김 의협 회장의 표를 제외한 8표 중 5표를 획득한 정 협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 위원은 치협, 치과병협, 의협, 한의협, 조산협, 간협, 약사회, 병협, 한방병협 등 9개 보건의약단체의 장과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표결에 앞서 정 협회장은 "김 의협 회장은 형님벌이고 존경하는 분이나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협이나 다른 단체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화합을 이끌기

위해서"라며 "고민을 많이 하고 뜬 눈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어떤 단체가 불이익 없이 정부와 조화롭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겠냐"고 위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의사가 메이저이기에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보험 수입이 곧 총수입이다"며 "의료계는 고사 직전이다. 공단과의 환산지수 계약시 각 단체가 원하는 계약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정 협회장이 재선됨에 따라 지난 2000년 1대 위원장으로 이기택 명예회장이 선출된 후 2대, 3대에 이르기까지 치협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돼 보건의약단체 사이에서 강한 치협의 위상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정 협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다시 한번 보건의약계 수장으로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의약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계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3년마다 구강검진 실시 반대" 치협 · 전국 11개 치대 예방치학 교수 반대건의서 공동 채택 국회 제출키로

치협은 전국 11개 치대 예방치과학교수들과 공동으로 학교구강검진을 현행 1년에서 3년마다 한번씩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채택,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치협은 전국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대한구강보건협회, 복지부 구강보건과 실무 사무관 등을 초청한 가운데 지난 6월 23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수돗물불소농도조절 사업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한 교수들은 학교보건법 법률 개정안이 최근 17대 국회에 재발의 된 것과 관련, 학교구강검진의 목적은 치아우식 등 구강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와 예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예방 우선의 치과검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의과쪽 검진의 논리와 동일시하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구강검진 주기가 1년이어야만 하는 정당하고 타당한 학술적 근거를 담은 반대 건의서를 작성, 11개 치대 예방치과학 교수 공동으로 채택, 이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방치학 교수들은 6개 대학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치과대학 학생의 고령화 현상, 여학생 비율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09년부터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치과의사 대폭 감소에 따른 수급 차질과 공중보건의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직급 보장문제와 관련해 일단 구강정책과가 이에 따른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예산삭감 등으로 주춤거리고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절 사업과 관련, 교수들은 앞으로는 수불농도조절 사업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시민단체,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